

목 차

2018년 제4차 OECD 뇌물방지 작업반회의 결과 보고서

2018. 12

1.	2018년 제4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12
붙임 1	회의 일정.....	16
붙임 2	회의 사진.....	25
붙임 3	결과문 요약본 국영문.....	26
붙임 4	OECD 보도자료 국영문.....	29
붙임 5	정부합동 보도자료	32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12. 11(화)~14(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참석자 : 44개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36개 OECD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러시아, 남아공) 등
 - 한국대표 :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수석대표), 양동훈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 문소희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전지선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김현경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사무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김민형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추의정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검사, 손미정 주오이시디대표부 1등서기관 등 10명

□ 주요 결과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우리나라의 4단계 이행심사 보고서(15개 권고사항 및 10개 follow-up 의제* 포함)와 보도자료 문안에 대해 합의함.
- 부패 위험이 높은 산업분야와 국가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개인, 기업 차원에서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해외 뇌물에 대한 법 집행 건수가 감소(유죄판결 4건, 석방 2건, 불기소 처분 4건,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 3건)

- 심사단은 3단계 평가 이후 해외뇌물 적발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요 권고사항으로 △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및 관련 법 집행이 뇌물방지법의 제한적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 △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간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및 사법 공조 적극 활용 △ 해외 뇌물 목적의 부정회계 적극 수사 △ 정부기관과 민간을 동원한 해외뇌물 적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함.
- 한편, 심사단은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제3자에 대한 뇌물 제공 처벌을 가능케 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고서에 포함함.
-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 정보를 국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정보의 국제 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도 긍정 평가
- 최종보고서는 12.20(목) 11:00(파리 시각)에 OECD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OECD가 보고서를 12.19(수) 24시간 엠바고 전제로 언론에 배포하는 것에 동의함. (최종보고서 요약본 및 보도자료는 붙임 참조)
- 작업반은 또한 2019년에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진전을 구두 보고하고, 2020년에는 모든 권고사항과 법 집행 노력에 대해 서면 보고 할 것을 권고함.

< * OECD 뇌물작업방지법의 권고사항 및 후속검토 의제 >

1. 권고사항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권고)

1. 해외뇌물범죄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변호사, 회계사, 감사관 등 적합한 비금융 인력들도 필요시 자금세탁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확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
 - b. 관련 직업군의 해외뇌물 범죄수익 세탁 및 해외뇌물 위험징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례 연구가 포함된 설명서 배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 c. 금융정보분석원은 직원들이 해외뇌물범죄를 전제로 하는 자금세탁의 혐의 거래보고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의심 거래보고를 분석 및 전송하는 업무프로세스를 검토할 것. [협약 7조; 2009년 권고 III.i 및 IX.i; 3단계 권고 5]
2. **한국 공공기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한국이 해외뇌물범죄를 적발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공공기관(재외공관, 무역 진흥 기관, 수출 신용 기관, 공적 개발 원조기관 및 기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협업하는 기관들)의 담당자들에게 해외뇌물범죄 위험 징후와 이를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분명하고 체계화된 지침 및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권고 IX.ii]
3. **언론**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작업반이 한국에 전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는 신빙성이 높은 해외 뇌물범죄 혐의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 b. 법 집행 당국이 국내외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배당할 것;
 - c. 언론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관련 법이 해외뇌물범죄 보도에 있어 실제로 완전히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협약 5조 및 주석 27; 2009 권고 별첨 I.D.]
4. **회계사와 감사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감사관들이 해외 뇌물 위험징후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이 회계 및 감사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인식제고 노력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협약 8조; 2009 권고 X.B.; 2단계 권고 2(a)]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 규제에 관한 권고)

5. **해외뇌물범죄**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북한 정권을 위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한국이 자국의 법제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1조; 3단계 권고 1(a)]
6.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증거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작업반은 해외뇌물범죄가 협약 1조에 부합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한국이 협약의 해외뇌물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해설서를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개별 또는 일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해설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국제상거래” 성립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 b. 지역 관행에 대한 고려, 뇌물 등 금전 지불에 대한 현지 당국의 용인 또는 그러한 금전 지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등이 기소나 처벌에 있어 불처벌 사유 또는 예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 c.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해외뇌물범죄가 해당 외국공무원의 자국법에 대한 입증 없이도 자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협약 1조 및 주석 3, 7]
7. **회계부정 범죄**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목적 또는 그러한 뇌물공여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회계부정 범죄에 대하여 모든 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것;
 - b. 회계부정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시 기소하며, 이를 위하여 법 집행당국을 대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제공할 것. [협약 8조; 2009년 권고 X.A.]
8. **해외뇌물범죄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이 수사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세탁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7조]
9.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의 확립 등을 통하여 검찰과 경찰 기관간의 적절한 협조, 정보 공유, 해외뇌물사건 수사 관련 기관 간 권한의 충돌 조정을 보장할 것;
 - b. 수사단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식수사 개시 전 다방면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
 - c. 감청은 국내 뇌물범죄 수사에서 사용 가능한 수사 기법이므로 해외뇌물범죄 수사에도 사용을 허용하도록 할 것;
 - d. 모든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있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것;
 - e.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
 - f. 해외뇌물범죄가 협약 1조에 반하는 요소 때문에 불기소 되지 않도록 한다;
 - g. 해외뇌물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등을 통하여 정치적 또는 다른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협약 1, 2, 5, 6조; 2009년 권고 III.i 및 별첨 I.D.; 3단계 권고 4(c)]
10. 해외뇌물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시급히 법안을 개정하여 해외뇌물범죄로 자연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높일 것;
 - b. (i)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실제로 자연인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그리고 (ii) 필요한 경우 해외뇌물범죄 사건에서 뇌물 및 뇌물수수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이 일상적으로 자연인으로부터 몰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지침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협약 3, 5조; 2009년 권고 IV, V; 3단계 권고 3]
11.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사법공조가 필요한 해외뇌물범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 수사기관에 교육 등을 제공하여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공조(MLA)를 요청하도록 할 것; 한국은 본 작업반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국 당국과의 접촉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사법공조를 활용할 것;

- b. 해외뇌물범죄 사건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청구가 적시에 회신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협약 5조, 9조, 10조]

(법인의 법적 책임 및 관여에 관한 권고)

12. 해외뇌물범죄를 저지른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신속히 법안을 개정하여 해외뇌물범죄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준을 높일 것;
 - b. 법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 지침 및 훈련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i) 해외뇌물범죄 관련, 실제로 법인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며, 그리고 (ii) 필요한 경우 해외뇌물범죄 사건에서 뇌물 및 뇌물수수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일상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몰수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해외뇌물범죄수익의 몰수와 산정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 [협약 2, 3, 5조; 2009년 권고 IV, V; 3단계 권고 3]
13. 법인의 관여 관련, 작업반은 한국이 해외진출 기업과 소통하는 모든 정부 기관과의 협력 하에 해외뇌물범죄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뇌물방지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이루어지는 민간의 관여를 위한 프로세스와 이니셔티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2, 5조; 2009년 권고 X.C. 및 부속서 II]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조치와 관련된 권고)

14. **해외뇌물범죄 방지를 위한 조세조치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한국 국세청을 통해 체계적으로 세금신고서를 검토하고 뇌물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 및 앞으로의 뇌물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할 것;
 - b.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뇌물협의를 국세기본법으로 인하여 법 집행 당국에 신고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정립할 것;

- c.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세금 감사 과정 등 별도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
- d. 국세청이 뇌물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도록, 기소 당국이 해외뇌물범죄 유죄판결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할 것. [2009년 권고 VIII.i; 2009년 세금 권고; 3단계 권고 8]

15. **공적 혜택**(public advantages)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조달청이 다자금융기관의 공공조달계약 금지기관 목록을 지속 확인하도록 장려할 것;
- b. 조달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계약 당국은 공공계약 입찰업체가 반부패를 위한 내부 통제, 윤리규정, 감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 c.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i) 한국국제협력단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마찬가지로 ODA 사업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자들이 어떤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선서하도록 하고, (ii) 계약 대상자뿐 아니라 한국 국제협력단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관련 기관의 직원들도 해외뇌물범죄의 위험성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것. [2009년 권고 XI; 2006년 수출신용 권고; 2016년 ODA 권고]

2. **후속검토 의제**

- 16. 판례, 관행 및 입법 현황이 변화함에 따라, 작업반은 다음 사항을 후속 검토할 것이다:

a.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검찰청 이첩 건 포함 해외뇌물혐의에 대한 공익신고의 효율성;**

- b.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공여행위 은닉을 목적으로 한 회계부정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
- c. 기소유예된 해외뇌물범죄 사건이 언제 어떻게 기소되는지의 문제;
- d. 해외뇌물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해외당국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좌 소유자에 대한 고지 유예 기간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e. 해외뇌물범죄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국제 요청에 대한 한국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여부;
- f. 자연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는 해외뇌물범죄 사건에서 법인의 법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g. 사건에 연루된 자연인이 한국인이 아닌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속인주의 관할권;
- h. 유관 법인의 해외뇌물 공여에 대한 법인책임;
- i. 법인에 대한 해외뇌물범죄 규제 수준;
- j. 해외뇌물범죄 관련 법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국제뇌물방지법 조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적절한 감독이행”의 적용

□ **관찰 및 평가**

- 4단계 심사의 최종보고서에는 그간 뇌물방지작업반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우리나라의 **해외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뇌물 법 집행 실적과 법인에 대한 제재수준 관련 권고가 3단계 심사에 이어 다시 포함되었지만**, 우리측이 심사단에 개진했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
- 우리나라의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법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기술이 여타 회원국의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미한 감소’라는 표현으로 완화됨.
- 정부의 비밀해제 문건 공개 관행과 정부부처 출입기자단 제도로 인한 **언론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제한** 관련 기술이 **우리측의 사실관계 정정 요청 등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있게 수정됨.**

- 개성공단 등에서의 북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방지 입법 권고는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었지만,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위스 등 일부 작업반 회원국들이 우리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3단계에 비해 완화된 권고가 채택됨.

※ 권고 5 : 한국의 국내법체계가 북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3단계 심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법 또는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을 특정하여 권고)

- 작업반은 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에 15개 권고사항과 10개의 후속보고 의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2011년 3단계 심사에서 권고받아 2014년 후속서면보고서에서 ‘미이행’ 판정된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1년 뒤에 구두 보고할 것을 요청한바, 2년뒤 후속 서면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고사항 중 정부와 민간을 동원한 해외뇌물 적발 역량 강화는 우리 재외공관의 해외 기업 활동 지원 노력과 관련이 있고, 현장 심사 등을 통해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뇌물방지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된 바,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세부 회의 결과

□ 3단계 이후 진전사항

- 심사단은 제3자 뇌물교부취득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 통과, 국제뇌물방지법 해설서 발간 등 법무부의 최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국내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점, 외국 수사기관의 사업공조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점 또한 한국 법무부검찰의 신뢰를 높인 점이라며 긍정 평가함.

※ 제3자를 통한 뇌물공여행위 처벌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 받았던 내용으로, 11.28. 국회 본회의 통과 및 12.18. 시행

※ 국제뇌물방지법 해설서는 1999년 법 제정 이후 19년만인 2018. 12. 제발간되어 검찰 내부망에 게시되었고, 검찰청, 경찰청, 법원, 권익위 등에 책자 배포 예정

- 또한 심사단은 최근 한국 검찰의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부패 수사 등 국내 부패 사건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에도 우호적 관심을 표명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심사단은 우리나라가 해외뇌물죄 의심 사건을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3단계 심사 이후 이러한 보호가 국내외 신고 모두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대표단은 심사 결과보고서 초안시 반영되지 않았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2018.4월기준)을 심사단에 제출, 관련 내용을 반영함.

- 또한 해외뇌물 관련 공익신고 접수시 이첩·이송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공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나 조사 기관으로 이첩함. 이첩할 때는 a) 지도·감독·규제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관, b)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함.
- 다만, 공익신고로 받은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추가 사실 확인이나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추가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해외 뇌물 적발

- 심사단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광범위한 보호체계 구축과 외국 수사기관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우수한 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고소·고발 접수, 해외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이첩 등으로 사건 적발이 한정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사전적·적극적 사건 적발 노력 및 FIU·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사건 인지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언론보도가 뇌물 사건 적발을 위한 주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수사 기관에서의 탐사저널리즘 등 활동에 대한 관심과 국내 언론 외 해외 언론에 대한 주기적인 스크리닝 등 적극적 인지(detection) 활동을 요청
- 정부의 비밀해제 문건 공개 관행 관련, 우리측은 30년이 지난 비공개 문서는 법률에 따라 대국민 공개로 전환되며, 기자단 소속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역시 신청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고서상에 이를 반영함.

- 언론의 자유 관련하여서는 출입기자단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평가하였지만, 우리 대표단은 출입기자단의 운영, 징계 등 과정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출입기자단 외 언론사의 자료정보 제공 요청 및 문의에도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관련법이 해외뇌물범죄 보도에 있어 실제로 완전히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완화된 권고문이 채택됨.

□ 법 집행

- (수사실적 감소) 부패위험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수출위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수사실적이 3단계 이후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OECD는 ‘Significantly Decrease(심각한 감소)’, ‘Extremely low(극심한 저조)’ 등의 표현으로 비판 논지를 부각하려 하였으나, 우리측이 사건수의 축소 대신 구조적 비리 적발, 대기업 등 다수 기업 처벌 등 적발된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 위주의 타 국가에 비해 우리의 집행 실적이 낮은 점이 아닌 점을 강조하여 ‘slightly decrease(경미한 감소)’ 등의 표현으로 수정함.
-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심사단은 법집행기관 및 법원의 국제뇌물 방지법 적용·해석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가 좁거나 일관되지 않은 해석 사례를 지적하고, 수사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개념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측은 최근 법무부에서 ‘국제뇌물방지법’ 해설서가 발간되었음을 설명하고, 향후 법집행기관 상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언급함.

- **(해외뇌물범죄 수사기간)** 심사단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사건에서의 3개월 수사기간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를 통한 증거 취득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측은 형소법 규정이 혼시규정인 점, 외국정보 취득은 시한부 기소 중지 사유인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OECD의 권고기조를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 취지로 변경함.
- **(구성공단 등 북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심사단은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현행 우리 형법과 국제뇌물방지법이 북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다루지 못해 법 집행의 구멍(loophole)이 발생한다고 하며, 우리 형법 또는 국제뇌물방지법이 북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측과 일부 작업반 회원국(뉴질랜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우리측 설명에 동의를 표명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 동향을 보아가며 우리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권고안을 합의함.
- **(해외뇌물사건의 처벌 등 제재)** 심사단은 해외뇌물사건에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낮은 법정형과 선고형을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하였고, 해외뇌물사건과 관련되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없음을 지적하며, 실무적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 철저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실제 법인에 대해서 수백만원 상당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됨을 지적하며 1년 후 벌금형 상향에 관한 진전 내용을 OECD에 보고할 것을 권고
 - ※ 국제뇌물방지법은 자연인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이 1천만원 초과 시 이익 2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 혹은 이익이 5억원 초과 시 이익 2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

붙임 1 회의 일정

2 | DAF/WGB/A(2018)4

TUESDAY 11 DECEMBER 2018

09:30-13:00

WGB consultation with external stakeholders (see separate agenda in annex 3)

13:00-14:30 Lunch

13:45-14:15 Presentation by Dr Claire Daams and Mr. Stephen Baker on the coope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the private bar

14:30-14:35

Item 1. Agenda

[DAF/WGB/A\(2018\)4](#)

The Chair will propose that delegates agree to adopt the agenda.

For Approval

14:35-14:45

Item 2. Summary Record

[DAF/WGB/M\(2018\)5](#)

[DAF/WGB/M\(2018\)6](#)

The Working Group will consider the draft internal and public summary record of the October 2018 meeting a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For Approval

14:45-15:00

Item 3. Management Group

Item 3.a. Report on the Management Group

Oral report on the Management Group Meeting on Monday 10 December 2018.

Item 3.b. Designation of the Chair, Vice Chair and members of the Management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Group Principles and Procedures, the Working Group will be invited to designate the Chair, Vice-Chair and Members of the Management Group before the end of the year (December 2018) to take office as of 1 January 2019.

For background:

- Standing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Management Group Members - [DAF/INV/BR/WD\(2011\)5/REV2](#)
- Council's manual for the Guidance of Chairs and Subsidiary Bodies of the Organisation (Chair's Manual) - [C\(2011\)40](#)
- Council: Elements of a Proposed Solution on Institutional, Financial and Structur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 [C\(2004\)1](#) and [C\(2004\)1/CORR1](#)

For Designation

15:00-15:15

Item 4. Report on the informal meet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Oral report on the informal meet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on Monday 10 December 2018.

For Information

15:15-18:00

Item 5. Tour de Table

RD 1

Session restricted to WGB members and participants

The Tour de Table discussions will be on cases and on the annual in-depth presentation of cases by one quarter of the Working Group members.

The countries to make an annual in-depth presentation of foreign bribery cases will be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olombia and New Zealand.

The Secretariat will send delegates by email an updated version of the Matrix for a confidential discussion. Countries scheduled to make in-depth presentations will have five minutes to present their cases. Presentations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cases with all delegates—including those cases not in the matrix.

If a country would like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an it can deliver in five minutes, it should provide it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in advance of the meeting. Countries not scheduled to make an in-depth presentation can provide information in writing. All contributions will be compiled and circulated to the Working Group in a Room Document.

Pursuant to the rules adopted in June 2007, delegates are encouraged to indicate to the Secretariat at least five working days prior to the plenary: (a) new developments they would like to report for cases already in the matrix; (b) new cases not in the matrix they would like to report; (c) comments they would like to hear on other Parties' cases figuring on the matrix; and (d) cases they wish to see deleted from the matrix. For this last point, delegates must send an email to the Secretariat at least five working days prior to the plenary with reasons why the case(s) should be deleted.

b. Updating the matrix process

The WGB will continue discussing the conversion of the matrix into a Database. In response to the call from the Chair in October 2018, select countries agreed to prepare a "business case" which will guide the next steps, and which will be discussed at the December meeting.

For Discussion**WEDNESDAY 12 DECEMBER 2018****Item 6. Self- and mutual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2009 Recommendation**

Background on Phases 1-4: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and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each Party. To ensure effective monitoring, the Working Group has developed a four-phase procedure.

For background on Items 6 a-f:

- [Phase 1 country monitoring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 [Phase 2 Monitoring Information Resources](#)
- [Phase 3 Monitoring Information Resources booklet](#)
- [Phase 4 Monitoring Guide](#)
- Schedule for Oral and Written Follow-up Reports to Phase 3: [DAF/WGB\(2017\)37](#)
- Schedule for Oral and Written Follow-up Reports to Phase 4: [DAF/WGB\(2017\)38](#)
- [Monitoring Schedule 2016-2024: DAF/WGB\(2016\)20/FINAL](#)

09:30-10:00

Item 6.a Phase 3 follow-up: parameters for the High-Level Mission to Russia[DAF/WGB\(2018\)57](#)

In March 2018, the Working Group approved in principle a High-level mission to take place in 2019. The parameters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format, proposed date and substantive issues were discussed in October 2018. A more detailed outline with further detail will be presented for discussion.

For background:

- Draft Plan for a High-Level Mission, Oct. 2018: [DAF/WGB\(2018\)37](#)
- Additional Written-Follow-up Report to Phase 2, Oct. 2018: [DAF/WGB\(2018\)48](#)
-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2, Mar. 2018: [DAF/WGB\(2018\)8](#)
-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2, Oct. 2017: [DAF/WGB\(2017\)54](#)
-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2, Mar. 2016 [DAF/WGB\(2016\)15](#)

For Discussion

10:00-10:30

Item 7. Report on the update of the 2006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he Secretariat to the 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will report on developments concerning the review of the 2006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For background:

- [2006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For Information

10:30-13:00

Item 6.b Phase 4: First reading of the draft report on Chile[DAF/WGB\(2018\)49](#)

For background:

- Responses by Chile to the Phase 4 Questionnaire [DAF/WGB\(2018\)50](#)

For Discussion*13:00-14:30 Lunch*

14:30-15:00

Item 8. Reports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ill update the Working Group on recent relevant developments.

For Information

15:00-15:30

Item 9. Reports by Invitees and Participants

WGB delegate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 Invitees. The WGB can also invite other Non-Members in accordance with its Global Relations Strategy. The Strategy provides that, commencing in 2015, Invitees are generally invited to attend one plenary session of the WGB each year, subject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Malaysia and Viet Nam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cember 2018 WGB plenary.

For Information

15:30-18:00

Item 6.c Phase 4: First reading of the draft report on Korea[DAF/WGB\(2018\)51](#)

For background:

- Responses by Korea to the Phase 4 Questionnaire [DAF/WGB\(2018\)52](#)

For Discussion**THURSDAY 13 DECEMBER 2018**

09:30-09:45

Item 10. Report on the June 2018 Roundtable with China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June 2018 Roundtable with China.

For Information

09:45-10:15

Item 11. Framework for Enhanced Engagement on Governance between the IMF and the WGB[DAF/WGB\(2018\)44/REV1](#)

In June 2018, the Working Group was informed that the IMF had decided to include information on supply side bribery in its annual Article IV Consultations of its members, and that it would draw on information from the Working Group's country monitoring reports for this purpose. In October 2018, the Working Group held an initial discussion of the procedure for this process. In this session, the Working Group will consider proposals for a revised procedure and their cost implications.

For Discussion

10:15-11:00

Item 6.d Review of the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Preparing for the written consultation with external stakeholders (discussion on the consultation paper only, not on revisions to the Anti-Bribery Recommendation)[DAF/WGB\(2018\)56](#)

At its June 2018 meeting, the WGB agreed to organise several consultations with external stakeholders in March 2019 as part of a roadmap for revising the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Further to its October 2018 approval on the general parameters for these consultations, the WGB will be invited to consider a brief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for the purpose of the written consultation.

For background:

- Review of the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Preparing for Consultations with External Stakeholders, Oct. 2018: [DAF/WGB\(2018\)45](#)
- Review of the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Process and Roadmap, Jun. 2018: [DAF/WGB\(2018\)25](#)

For Discussion

11:00-13:00

Item 6.b Phase 4: Second reading of the draft report and discussion on the draf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Chile[DAF/WGB\(2018\)49](#)**For Discussion***13:00-14:30 Lunch*

14:30-15:00

Item 12.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

The Secretariat to the WPSOPP will update the Working Group on the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For Information

15:00-15:15

Item 13. Report on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For Information

15:15-15:30

Item 14. OECD activities in the area of corruption and sports

The Secretariat will report on the topic of corruption and sports, in particular relevant developments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in Sports (IPACS).

For Information

15:30-16:00

Item 15. Global relations activities: Initiatives in Africa, Asia-Pacific,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ACN),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Anti-Corruption Network (ACN) for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 and the Pacific
-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joint OECD/AfDB Initiative to Support Business Integrity and Anti-bribery Efforts in Africa.
-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the MENA region
- Oral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the OECD Latin America & Caribbean Anti-Corruption Initiative
- Any other global relations activities

For Information

16:00-18:00

Item 6.c Phase 4: Second reading of the draft report and discussion on the draf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Korea[DAF/WGB\(2018\)51](#)**For Discussion****FRIDAY 14 DECEMBER 2018**

09:30-10:00

Item 6.e Phase 3 follow-up: parameters for the High-Level Mission to Sweden[DAF/WGB\(2018\)55](#)

At its June 2018 meeting, the WGB agreed to a plan for a High-Level Mission to Sweden. During this session, the Working Group will discuss the preparations for the mission, which is scheduled for the week of 14 January 2019.

For background:

- Preparing for the high-level mission to Sweden, Oct. 2018: [DAF/WGB\(2018\)39](#)
- Draft Plan for a High-Level Mission to Sweden, Jun. 2018: [DAF/WGB/RD\(2018\)1](#)
- Sweden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3, Oct. 2017: [DAF/WGB\(2017\)55](#)
- Sweden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3, Dec. 2016: [DAF/WGB\(2016\)64](#)

For Discussion

10:00-10:30

Item 6.f Phase 3 follow-up: Additional written report by Poland[DAF/WGB\(2018\)54](#)

In conformity with the Phase 3 Procedure, and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raised in the June 2013 Phase 3 evaluation report, the October 2015 two-year written follow-up report, and the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s in June 2016; October 2017 and March 2018, Poland has been invited to report in writing in December 2018 on progress made to implement Phase 3 recommendations 1, 2a, 3c and 8b.

For background:

- Additional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3, Mar. 2018: [DAF/WGB\(2018\)7](#)
- Written Follow-Up Report to Phase 3, Oct. 2017: [DAF/WGB\(2017\)53](#)

For Discussion

10:30-11:30

Item 16. Discussion of the WGB study on resolutions[DAF/WGB\(2018\)41/REV1](#)

The Working Group will discuss a revised draft of the study on non-trial resolutions of foreign bribery cases scheduled to be conducted in 2018 as well as a revised draft of the expanded set of Stocktaking Tables and Preliminary Data Sets annexed to the draft study. It is based on discussions by the WGB in October 2018 on the first draft Resolution Study [[DAF/WGB\(2018\)41](#)] and draft Cross-Country Data Tables [[DAF/WGB\(2018\)41/ADD1](#)]. Former discussions on this topic started in December 2017, March 2018 and were followed by a written procedure on the scope and methodology for the study [[DAF/WGB\(2017\)77](#), [DAF/WGB\(2018\)13](#) and [DAF/WGB\(2018\)13/REV1](#)]. Unless the Group agrees on the revised version of the study at the December plenary, it will also discuss the next steps for the approval, public launch and publication of the study.

For background:

**KOREA PHASE 4 – SCHEDULE OF MEETINGS –
WORKINGGROUPONBRIBERY,11-14DECEMBER2018**

- Proposal for Horizontal Work on Detection and Settlements, Jun. 2016: [DAF/WGB\(2016\)25](#)
- Study on Settlements: Draft outline, Information on Progress and Next Steps, Mar. 2018: [DAF/WGB\(2018\)13](#), [DAF/WGB\(2018\)13/FINAL](#), and Jun. 2018: [DAF/WGB\(2018\)26](#)
- Draft Resolution Study [DAF/WGB\(2018\)41](#) and Draft Cross-Country Data Tables, Oct. 2018: [DAF/WGB\(2018\)41/ADD1](#)

For Discussion

11:30-12:00

Item 17. Update on the 2019 Global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Forum

The 2019 edition of the Global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Forum will take place on 20-21 March 2019 at the OECD headquarters. The theme for this edition will revolve around new technologies, and the risk and opportunities that they present in the field of integrity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is session, the Secretariat will provide a briefing on the panels and sessions that the Anti-Corruption Division will be organising during the Integrity Forum and week. Additional information to register and participate to the event will also be shared.

For Information

12:00-12:15

Item 6.b Phase 4: Third reading and adoption of the repor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Chile [if necessary]

[DAF/WGB\(2018\)49](#)**For Discussion**

12:15-12:30

Item 6.c Phase 4: Third reading and adoption of the repor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Korea [if necessary]

[DAF/WGB\(2018\)51](#)**For Discussion**

12:30-12:45

Item 18. Any other business**For Discussion**

DATE/TIME	EVENT	PARTICIPANTS	PLACE
Tuesday 11 December 2018			
11:00 – 12:00	First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Marshall Building (MB) 1122
12:00 – 14:00	First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Wednesday 12 December 2018			
15:30 – 18:00	First reading of the draft report on Korea	WGB	CC 12
18:30 – 19:30	Second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MB 1122
19:30 – 20:30	Second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20:30 – 21:00	Second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draft recommendations, the executive summary and the press re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Thursday 13 December 2018			
16:00 – 18:00	Second reading of the report and discussion on the draf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the Korea	WGB	CC 12
18:30 – 19:30	Third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and related doc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MB 1122
19:30 – 20:00	Third preparatory meeting on the draft report and related doc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Finland• Italy• O E C D Secretariat	
Friday 14 December 2018			
12:15 – 12:30	Third reading and adoption of the report,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and press release for the Korea	WGB	CC 12

붙임 2 회의 사진



붙임 3 결과문 요약본 국영문

평가보고서 요약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작성한 4단계 보고서는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2011년도 3단계 평가 이후로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시행, 법인의 책임, 해외뇌물범죄 적발 등을 비롯하여,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집행 실적은 3단계 이후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로 한국에서는 4건의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소된 다른 2건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4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추가로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1건이 재판 진행 중이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산업분야와 국가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개인, 기업 차원에서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단계 이후로, 한국 법 집행기관의 적극적 해외뇌물범죄 적발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한국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 시스템(사건 배당 및 정보 공유 포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뇌물범죄 의심사건 사전 적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자금세탁방지 신고요건, 조세 당국의 신고의무 정의,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교류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적발역량 증진 등)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적발역량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은 해외뇌물범죄 의심사건을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3단계 이후 이러한 보호가 국내외 신고 모두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작업반은 또한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의 처벌 공백을 해결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약한 처벌 및 법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뇌물방지작업반은 또한, 수사관, 검사 및 판사가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역 현지관행을 고려하고,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 등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현행 수사기간 및 법인의 공소시효 또한 효율적인 해외뇌물범죄 수사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뇌물범죄 수사는 보다 적극적인 형사사법공조의 활용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보고서와 그에 따른 권고안은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12월 13일에 작업반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 보고서는 심사단의 조사 내용뿐 아니라 한국이 직접 제공한 법제도, 통계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련 정보는 2018년 7월 심사단이 서울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법 집행, 언론 및 시민 사회 대표자들과 가진 회의에서도 수집하였다. 한국은 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 진행상황을 1년 안에 작업반에 구두보고할 예정이며, 2년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This Phase 4 report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evaluate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Korea'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instruments. The report tracks progress made by Korea since the 2011 Phase 3 evaluation. It details Korea'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cluding on enforcement of its foreign bribery laws, corporate liability and detection of foreign bribery.

Korea's enforcement record has declined since Phase 3. Since 2011, Korea has secured convictions in four foreign bribery cases; two other prosecutions resulted in acquittals, and decisions not to prosecute were taken in four other cases. Two further investigations and one criminal trial are ongoing as of the time of this review. In view of the level of exports and outward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in jurisdictions and sectors at high risk for corruption, Korea must increase its level of enforcement of foreign bribery and related offences against individuals and companies. Since Phase 3, little has been done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Korea'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oactively detect and investigate foreign bribery. The Working Group calls for clarification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Korea's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case allocation and information-sharing. Greater cross-agency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should also be introduced on detection and reporting of suspected bribery to relevant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as concerns AML reporting requirements, clarification of reporting obligations of tax authorities, and enhancing detection capacities by Korean public officials in agencies that interact with Korean companies operating abroad. The report also highlights good practic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Korea's detection capacities: in particular,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provides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who report suspected foreign bribery, and the scope of protections has been expanded since Phase 3, to cover notably

both internal and external reporting. The Working Group also welcomes the recent passing of legislation, which closes the loophole concerning bribes paid to third party beneficiaries.

A longstanding recommendation remains concerning sanctions available for natural and legal persons, which are insufficient and should be increased in law and in practice. The Working Group further notes that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oreign bribery offence by investigators, prosecutors and judges raises potential concerns about restrictive interpretations of 'international business,' consideration of local custom and a non-autonomous approach to the defini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 and urges Korea to provide written clarification on these points. The current investigation time limit and statute of limitations for legal persons have also impeded effective foreign bribery enforcement and should be reviewed. Foreign bribery investigations c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a more proactive use of MLA.

The report and its recommendations reflect the findings of experts from Finland and Italy and were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TBC] December 2018. It is based on legislation, data and other materials provided by Korea, as well as research conducted by the evaluation team. Information was also obtained during an on-site visit to Seoul in July 2018, during which the evaluation team met representatives of Kore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w enforcement, media, and civil society. Korea will submit an oral report to the Working Group within one year on progress made to increase foreign bribery sanctions, in particular for legal persons, and a written report in two years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recommendations and its enforcement efforts.

보도자료

OECD, 해외뇌물사건의 적발 및 처벌 강화를 한국에 권고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이번에 발간한 평가보고서는 한국이 국제뇌물방지법의 적용을 보다 확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뇌물 사건을 적발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의 집행은 2011년 이후 약화되었으며, 한국이 부패 위험성이 높은 국가들 및 산업분야에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뇌물 방지법 집행 건수는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 한국은 특히 지속적으로 권고된 법인 등에 대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법 집행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해외뇌물 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 44개 회원국은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를 최근 완료하여 다음 사항을 한국에 권고한다.

- 해외뇌물범죄 사건수사에 있어서 검찰·경찰 간의 협조,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한다.
- 해외뇌물범죄의 전제 범죄가 되는 회계부정 및 자금세탁 범죄를 강력히 수사한다.
-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수사기간 및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 정부기관 및 해외뇌물적발 민간 전문가 활용을 통해 범죄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뇌물방지 시스템의 긍정적 성과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최근 국회 통과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를 이용한 뇌물제공행위의 처벌 공백을 해결한 것과 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틀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작업반 내의 회원국가들에게 모범사례가 되며 잠재적으로 해외뇌물범죄 적발에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해외뇌물 사건에 있어서 외국 법 집행기관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도 고무적이다. 한국은 효율적으로 국제사법공조 요청에 대응하여 외국 당국에 의해 이첩된 뇌물사건들을 수사하였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제 4단계 한국 보고서를 2018년 12월 13일에 채택하였다. 열람 가능한 본 보고서는 71-75페이지에 작업반의 권고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뇌물 방지와 관련된 한국의 최근 법 집행 활동, 한국 시스템의 법적, 정책적, 제도적 특징들을 기재하고 있다. 한국은 법인에 대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의 발전상황을 2019년 12월에 구두로 작업반에 보고하며, 2년 (2020년 12월)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서면 보고서 또한 일반 공개된다.

본 보고서는 2016년에 시작된 작업반의 제4단계 평가의 일환이다. 4단계는 대상국에 특화된 이슈와 긍정적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전 단계에서 다루지 못한 이슈를 포함하여 적발, 집행, 법인의 책임, 국제 협력도 평가한다.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는 OECD 반부패과 Daisy Pelham (+33 1 45 24 90 81)로 연락바라며, 한국의 반부패 정보는 <http://www.oecd.org/daf/anti-bribery/korea-oecdanti-briberyconvention.htm>. 에서 확인 가능하다.

Press Release

Korea must enhance detection and reinforce sanctions to boost foreign bribery enforcement, says OECD

Korea must step up enforcement of its foreign bribery laws and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oactively detect and investigate the offence, according to a new report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Enforcement of foreign bribery has weakened since 2011 and the enforcement rate does not correspond to the significant level of exports and outward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in countries and sectors at high risk for corruption. Korea needs to address key elements of its legislative framework, in particular a longstanding recommendation to increase the level of sanctions for foreign bribery, notably for companies, and ensure that application of its foreign bribery law is not subject to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by its law enforcement and judiciary. Korea must also be more proactive in u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reign bribery cases.

The 44-country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has just completed its Phase 4 evaluation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related instruments.

The Group further recommends that Korea:

- Improve coordination, information-sharing and cooperation in foreign bribery investigations within and between prosecutorial and police agencies;
- Vigorously enforce related offences of false accounting and money laundering predicated on foreign bribery;
- Ensure the current investigation time limit and the timeframe for prosecuting companies for foreign bribery are sufficient to allow for effective foreign bribery enforcement; and
- Enhance its detection capacities by mobilising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sector professionals with particular potential for detecting foreign

bribery.

The report also notes positive aspects of Korea's anti-bribery framework, notably the recent passing of legislation to close the loophole concerning bribes paid to third party beneficiaries, and its comprehensiv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whistleblower reporting and protection. This is an example of good practice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Group in this area, and constitutes a potentially strong asset for detecting foreign bribery. Korea's positive response to foreign counterparts in transnational bribery cases is another encouraging feature: Korea has responded efficiently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requests by foreign countries, and investigated foreign bribery reports referred to them by foreign authorities.

Korea's Phase 4 report was adopted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on 13 December 2018. The report, available at, lists the recommendations the Working Group made to Korea on pages 71-75, and includes an overview of recent enforcement activity and specific legal, policy,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Korea's framework for fighting foreign bribery. Korea will submit an oral report to the Working Group in December 2019 on progress made to increase foreign bribery sanctions, in particular for legal persons, and a written report within two years (December 2020) on its implementation of all recommendations and its enforcement efforts. This report will also be made publicly available.

The report is part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s fourth phase of monitoring, launched in 2016. Phase 4 looks at the evaluated country's particular challenges and positive achievements. It also explores issues such as detection, enforcement, corporate lia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covering unresolved issues from prior reports.

For further information, journalists are invited to contact [Daisy Pelham](#) of the OECD's Anti-Corruption Division, (+33 1 45 24 90 81). For more information on Korea's work to fight corruption, please visit <http://www.oecd.org/daf/anti-bribery/korea-oecdanti-briberyconvention.htm>.

붙임 5

정부합동 보도자료

보다나온 권익위

국민신문고

공동 보도자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 7073, 7078
(F) 044-200-7911

담당부서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전지선 과장
(02-2100-7736)

법무부 국제형사과 구승모 과장
(02-2110-329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정윤정 과장 (044-200-7151)

• 2018.12.20.(목) 17:00

• 총 3쪽

대한민국, 청렴사회에 더 가까워지다

-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 심사 수검 -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2.11(화)-12.13(목)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12.20(목)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OECD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daf/anti-corruption) 참조

*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1999.2월 발효), 현재 OECD 36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러시아, 남아공)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임.

- 우리나라는 원 협약당사국으로서 1999.1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총 5조)을 제정했고, 1999년 1단계, 2004년 2단계, 2011년 3단계, 2018년 4단계 심사 수검

-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이하 ‘국제뇌물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

-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실적이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며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그 외에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법정형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OECD 작업반회의에서의 평가는 청렴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